진실이 오른다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4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2)970-0114 061)360-5050

상용화 앞둔 전남대 '의료로봇' ▶2
주민증 위·변조…유흥업소 가는 10代들 ▶6
문화로 키우는 지역경제 ▶1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 222-8111
kwangju.co.kr
제19606호 1판 2013년 11월 4일 월요일 (음력 10월 2일)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 합니까, 안합니까?

7개월 앞 지방선거 공천방식·룰 아리송 입지자들 대혼란

내년 지방선거(6월4일)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출마 예정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지방선거의 최대변수로 꼽히고 있는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이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고, 안철수 신당 창당도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여기에 각 정당의 '공천 룰'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기사 3면〉

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여야의 극한 대치로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정치 및 국회 쇄신안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단 한차례도 다루지 못하고 지난 9월30일 특위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내년 기초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선거전략을 제대로 짜지 못한 채 혼란을 겪고 있다. 정당공천제가 유지될 경우 당내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 않으면서 경선 룰과 일정 등이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경선 문제만을 꾸준히 논의했을 뿐 기초선거 후보 경선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선거 행보를 준비했던 광주·전남지역 일부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은 향후 정치일정을 관망하며 물밑 행보로 바닥 민심을 다지는데만 주력하고 있다.

한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가 유지될 경우 '당내 경선'을 한번 노려보겠다는 계획이지만, 공천제가 폐지되면 사실상 현역 단체장이 유리한 상황이어서 선거전략을 바꿔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정당공천제 폐지가 '물 건너 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언제 또 정치권이 폐지 여부를 논의할지 몰라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도 출마 예정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창당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지역구에서는 여러 명의 신당 후보들이 거론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신당 창당 준비작업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모든 선거구의 후보를 당내 경선을 통해 뽑겠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있어 창당이 늦어질 경우 신당의 경선 일정과 경선 룰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일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선거판이 여전히 '안갯속'"이라며 "후보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여야가 하루빨리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문제와 각 당의 경선룰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4학년도 전기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과정(야간) 모집
● 모집분야 : 행정학과 (공공행정전공, 자치행정전공)
● 모집인원 : 00명 (광주반, 여수반, 남악반)
● 전형방법 : 면접고사 100%
● 원서접수
☞ 특별전형 : 2013.10.28(월) ~ 11.18(월)
☞ 일반전형 : 2013.12.02(월) ~ 12.16(월)
2014년도 최고정책 및 관리자과정생 모집
모집기간 : 2013. 11. 11 ~ 2014. 02. 28
● 문 의 : TEL 062-530-5196 FAX 062-530-2266
● 홈페이지 : http://cnugpa.kr

오색단풍 내려앉은 무등산 3일 국립공원 무등산 충장사~원효사 가는 길에 알록달록 오색 단풍이 곱게 내려앉았다. 기상청은 오는 6일께 단풍이 무등산의 80%를 물들이는 '단풍 절정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헬기 조종=광주시소방항공대 기장 이정곤, 부기장 문연석〉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세계수영대회 정부지원 국제경기로"

국회의원 154명 개정안 발의…예산 지원 의무화
강시장 "국회 동의 받고 시민 명예 회복돼 다행"

여야 국회의원 154명이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이하 세계수영대회)를 정부가 법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대회 성공 개최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이번 공동 발의에는 민주당과 새누리당, 비교섭단체 국회의원 등 여야를 불문하고 고르게 참여했다는 점에서 공문서 위조 논란 등으로 실추된 대회 이미지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광주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여야 의원 154명은 2019년 광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국제경기대회'로 지정하고,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법안에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 등 5개 종목만 국제경기로 지정돼 있다.

광주시는 개최비용을 1149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에서 개최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지원이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120명, 새누리당 28명, 비교섭단체 6명 등 국회의원 총 정원 299명 중 절반이 넘는 154명이 서명했으며, 이미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개정안에 대해 "국회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연말 정기국회 통과가 유력시된다.

이번 공동 발의에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정의화, 이재오, 이인제, 이주영 등 중진 의원이 대거 서명했으며, 비교섭단체에서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직접 참여해 무게감을 더했다는 평가다.

법 개정을 국회의원 과반 이상이 공동 발의한 사례는 여야가 사전합의하거나 집권당이 당론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처음 있는 일로, 세계수영대회의 높은 가치를 정치권에서도 인정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과반이 개정안에 서명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은 정치적 효과가 있다"며 "그동안의 오해를 말끔히 씻고 광주시민의 자존심과 명예가 회복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광주시의 세계수영대회 유치가 확정된 직후 '유치과정 초기에 공문서 일부를 위조했다 정정했다'며 대회 지원 불가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박진표기자lucky@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68년만의 승소

미쓰비시 강제징용 한·일 소송 14년만에 광주지법서 승소 판결

일제강점기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 징용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68년 만에 한(恨)을 풀게 됐다.

〈관련기사 3면〉

광주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이종광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양금덕(82)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 4명에겐 각각 1억5000만원을, 숨진 아내와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겐 8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지난 7월 서울고법(신일철주금 상대·배상액 1인당 1억원)과 부산고법(미쓰비시 상대·배상액 1인당 8000만원)판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며 여자 근로정신대 사건 승소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원고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 뒤 "정부가 외면하는 동안 14년 가까지 소송을 하고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시민단체와 일본의 양심 있는 이들의 힘이 컸다"며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강제 징용 피해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시민과 양국 정부 사이의 응어리진 감정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양 할머니 등은 지난 1999년 3월 1일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